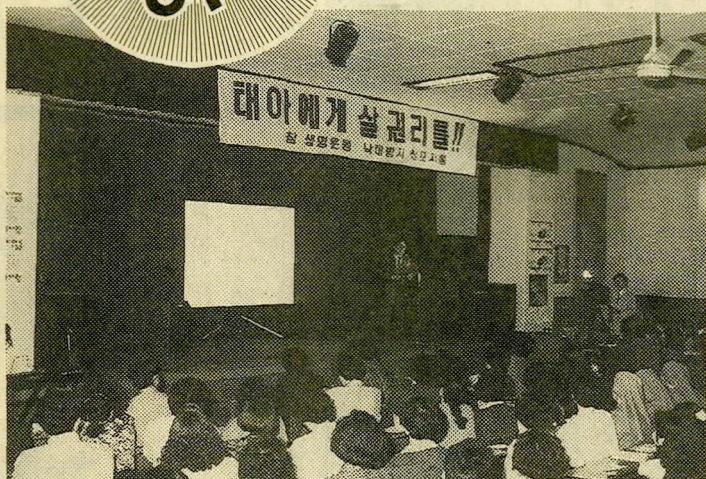




종교계 논란 재연

법무부 입법예고 싸고 엇갈린 반응

천주교 "殺人행위 절대不可" 고수
他宗教 "현실 외면할수 없다" 여론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중 낙태부분을 둘러싸고 종교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개정시안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했던 낙태죄를 손질스임신 이 모체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태아의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장간이나 혼

인장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낙태문제가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심각한 고민거리인 점을 감안, 각종교가 이에대한 명백한 지침이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천주교의 경우 개정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낙태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 주교단의 한관계자는 "관련공청회가 열리게

되면 다시 한번 천주교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교회안에서는 오래전부터 낙태를 금지해왔다고 밝혔다."

천주교 주교단도 지난 해 말 발표한 사목교서에 서도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면서 "임태되는 첫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인간성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또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으로 낙태를 무제한 묵인, 인명경시풍조 조성"에 앞

장쳤다면서 낙태금지법을 강요할 것을 촉구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 마담은 "법무부에서는 낙태제한을 반대하며 생명운동을 펼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 아직 공론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제한하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기독교한국침례교총본부의 孫鳳鏞이사장(서울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형법개정안중 낙태부분을 둘러싸고 종교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정은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천주교의 「낙태금지 심포지엄」 장면.

대교구)는 "기독교의 정립된 입장이 없지만 기독교적 상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생명부터 없게 사회적 책임이나 인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기독교장로회연신도회 전국연합회 尹秀卿회장도 "낙태제한하라는 대한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열렬히 제한된다면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불교계의 경우 因果의 수리를 거스르는 낙태를 교리적이라는 용납할 수 없지만 중생들의 현실

살을 도의시킬 수 없다는 입장.

태고종 교단국장 法顯스님은 "낙태 중생의 고통만으로도 해결방안을 찾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회심정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국대경주캠퍼스 白庚正교수도 "제한하라는 불가피하다면서 불교계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유교에서도 "낙태가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임신의 경우에는 그러해야 한다"는 姜正熙전혜원위원장(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